KORDI
ISSUE PAPE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021-5

발행일 2021.12.24. / 발행인 김미곤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우)10310 | TEL : 031)8035-7500 | E-mail : webmaster@kordi.or.kr

위드코로나 시대의 노인일자리 전망

박 경 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keh222@kordi.or.kr)

요약

-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으로 민간영역에서 일자리 규모는 줄어들면 공적 영역에서 창출되는 노인일자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 고령자 일자리는 반복적인 단순 육체노동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기술발전과 자동화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반복적 노동, 예컨대 돌봄, 상담, 교육, 미용 등에서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음.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취업형, 창업형)는 노동시장에서 노인이 진입 가능한 일자리가 축소되는 변화를 겪으면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장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을 통한 노인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적극 활용 필요
- 특히 신노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필요가 높은 사업아이템 개발을 모색할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참여소득과 일자리보장제를 결합한다면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의 복지와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 전통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노동과 관련된 복지문제

- 전통적으로 산업사회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위기는 실직, 산재,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

-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 : 탈산업화 사회에 접어 들면서 심화된 비정규직 노동,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 돌봄(요양과 보호)이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각
- 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복지국가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위기 확대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노동연계 방식의 복지적 접근 무력화

- 코로나19 관련 신조어 : 펜데믹(pandemic), 언택트(untack),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뉴노멀 시대(new normal), 포스트코로나 시대(post corona) 등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가 간 고립주의 강화,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가 약화되고 기존의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 확대
-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필요한 무인화, 원격화를 활용한 기업의 업무방식 도입, 산업분야에서 AI,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기술 급성장
-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 교육, 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관계부처합동, 2020)
-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장애인 등 취약집단을 위한 돌봄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실업자의 실업급여 확대, 기업의 일자리 유지, 근로시간 및 소득감소에 대비해 기업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지원 확대 정책 강화

▷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공급과 수요 부문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경제적 둔화를 가져오고, 개별 국가의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세계적으로 93%의 국가에서 경제 위기를 경험하였고, 2020년 전 세계 노동시간이 1분기에 5.4%, 2분기에 14% 감소하였음(World Bank, 2020; ILO, 2020).

▷ 단기적, 장기적 경기회복 전망

-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V자형의 빠른 회복이든지 U자형의점진적 회복이든지, 장기적 전망은 양극화를 촉진하는 양상(K자형)을 띠면서, L자형의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홍태희,2020).

▷ 장기회복 전망 : K자형 → L자형

- Severino(2020) : 경기회복이 기존과 다른 K자형으로 전개된다고 주장
- 홍태희(2020) : K자형 경기회복세는 장기적으로 L자형 전환 가능성 높음. 그 이유는 언텍트 환경에서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직과 일용직 노동자, 서비스 종사자, 현장 근무자 등 주로 저소득층에서 실업이 발생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확대 되는데, 정부정책이 기업지원에 집중된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면서 실물가치 상승에 실패해 금융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19는 전반적인 고용과 직업 분포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

- 매킨지 보고서(MacKinsy Global Institute)에 따르면, 2030년까지 건강보조원, 기술자, 간병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관련 직업군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반면에 지역사회 서비스, 건설, 음식서비스, 사무실 보조, 생산 및 창고작업에서 일자리 감소가 예측됨.

〈표 1〉 국가별 코로나19 이후 총 고용점유율 변화 추정(2018-2030)

(단위: %)

직업분류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중국
건강보조원, 기술자, 간병인	1.6	1.9	1.4	1.4	2.2.	2.7
건강전문가	0.8	0.7	0.9	0.7	1.2	1.3
창작 및 문화 예술	0.5	0.4	0.4	0.4	0.2	0.4
STEM 전문가	1.0	1.2	1.0	1.0	1.0	1.2
관리자	0.7	0.6	0.4	0.9	0.6	0.5
운송	0.3	0.6	0.1	0.1	0.3	0.9
비즈니스/법률 전문가	0.3	0.3	1.1	0.3	0.2	1.1
지역사회 서비스	-0.3	-0.1	0.1	-0.3	-0.2	0.8
건설	-0.3	0.0	-0.2	-0.3	-0.1	0.3
교육 및 직업훈련	0.0	0.4	-0.1	0.2	-0.1	0.4
자산관리	0.4	-0.2	-0.2	-0.2	0.1	0.5
음식서비스	-0.6	-0.3	-1.1	-0.7	-0.7	0.5
고객서비스 및 판매	-0.9	-1.9	0.2	-0.8	1.1	1.3
기계설치 및 수리	-0.2	-0.2	0.0	-0.1	-0.2	-0.1
사무실 보조	-2.1	-2.3	-2.2	-2.2	-2.6	0.3
생산 및 창고작업	-1.0	-1.0	-1.7	-0.3	-0.7	-3.8
농업	-0.2	-0.3	-0.3	0.0	-0.1	-8.0

주1) 코로나19 이전 변화는 자동화, 소득증가, 인구 고령화, 기술사용 증가, 기후 변화, 인프라 투자, 교육수준 상승, 무급노동의 시장화 요인이 포함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에는 전염병 경향, 가속화된 자동화, 전자 상거래, 재택근무 증가, 출장 감소 요인을 포함하였음.

자료: MacKinsy Global Institute 분석자료(Lund et al(2021)

2. 복지국가의 실업 및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방식

1) 실업급여 확대

▷ OECD 국가들의 실업급여 확대 조치

- 코로나 19 위기가 노동시장(고용, 근로시간 단축)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10배 이상 컸음(OECD, 2020).
- OECD 국가의 실업급여의 접근성 및 관대성을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

〈표 2〉 OECD 국가들의 실업급여 확대 조치

조치방법	확대 내용	국가사례
접근성 및 적용범위 개선	최소 기여조건 완화 또는 면제, 고용요건과 관련된 자격기간 연장, 이전에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던 집단에 대한 혜택 보장	핀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미국, 캐나다, 라트비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호주, 벨기에, 콜롬비아
지급기간 연장	급여 지급기간 연장, 급여기간 종료된 실업자들에게 특정시점까지 기간 연장, 급여대기기간 폐지	덴마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 미국
관대성 증대	급여인상(초과혜택, 급여대체율 인상, 급여상하선 인상), 급여 수급자에게 보조금 도입, 소득공제 실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콜롬비아,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20을 토대로 작성

2) 고용유지제도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고용유지제도 (Job Retention Scheme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규모 실업을 억제

- 고용유지제도는 일하지 않은 시간에 임금을 보조해 주는 단시간 근로지원(short-time work),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비용을 보조해주는 임금 보조금 제도(wage subsidy schemes)로 구성
- 기존의 단시간 근로지원의 접근성과 적용범위 확대, 급여의 관대성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격범위 확대, 신규 임금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국가 사례들이 나타남.

〈표 3〉 OECD 국가들의 고용유지제도 활용

조치방법	확대 내용	국가사례
기존의 단시간 근로지원(STW)의 접근성과 적용 범위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최소 단축 근로시간 조건 완화, 적용 기업규모 확대, 온라인 신청절차 도입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급여 관대성 증대	STW의 소득대체율 상향, 기업의 비용을 낮추거나 면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라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미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접근성 개선	임시직, 파견직, 자영업자의 가입자격 범위 확대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터키
신규 임금보조금 제도	표준 임금보조금(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충당하는 임시 임금보조금 도입, 기존 STW 제도를 임시 임금보조금으로 전환	호주, 캐나다,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20을 토대로 작성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환경의 변화 : 기술진보와 노동시장의 위기

▷ 기술진보에 대한 인간의 양가감정 : 풍요에 대한 희망 vs 미래에 대한 두려움

- 19세기 초반 영국의 러다이트(Luddite) 운동 : 산업화, 자동화, 자본가의 착취에 맞선 계급투쟁 및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섬유기계를 파괴
-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이루는 새로운 기술혁신, 즉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등 7대 분야의 핵심 신기술이 고도화 되는 차 세대 산업발전 단계
-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자동화로 인해 인간이 수행하는 많은 직무를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우려가 큼

▷ 4차 산업혁명과 고용 간의 관계 : 낙관론 vs 비관론

- 낙관론은 기술의 보상효과(compensation effect)를 이유로 기술 생산성이 높을수록 고용이 확장된다고 주장함. 즉 기술이 경쟁력 있는 노동수요를 증가시키고, 숙련성 이 요구되는 직무일수록 노동수요의 대체 가능성이 적음(Arntz et al, 2004; Goods et al, 2014; Gregory et al, 2015; Marcolin et al, 2016). 하지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가 많은 일자리는 대체 가능성이 높아 노동수요, 노동시간의 감소로 나타남.

  * Gregory et al(2015)) : 유럽 27개국에서 1999–2010년에 걸쳐 컴퓨터 시대를 맞이해 116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

- 비관론은 총량가설, 즉 노동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술진보로 인해 일자리의 감소를 경험한다는 입장

  * 대표적인 초기연구 : Frey and Osborne(2013)에서 직업의 47%가 20년 이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고, WEF(World Economic Forum)의 〈고용의 미래 (The future of Jobs)에서는 500만명이 5년 이내 실업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WEF, 2016)

▷ 하지만 디지털 기술 혁신은 정형편향적 업무(routine-biased)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직업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

- 창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숙련·고임금의 직무와 저숙련·저임금 직무는 지속되지만 정형화된 중간숙련 직무는 기계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 (Goos et al, 2014; OECD, 2016: Marcolin et al, 2016; 황기돈, 2017).

- 이는 창의성이나 추상성과 같은 인간의 고유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가 어려운 반면 정형화된 직무는 상대적으로 쉽게 기계화 될 수 있기 때문

▷ 제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불평등, 빈부격차의 위험성 초래

-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이나 일거리(short jobs, tasks, projects)를 중개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노동

▷ 플랫폼 노동의 규모

-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따르면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인원은 179만명(전체 취업자의 7.4%)이며, 단순 구인구직앱 이용자와 전자상거래 종사자를 제외하고 플랫폼노동자를 정의할 경우 전체 취업자의 약 0.92%, 약 22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

4. 새로운 사회정책 대안 : 참여소득제와 일자리보장제

▷ 기본소득은 노동 없는 미래사회에서 기존 사회보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음.

-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노동이나 소득(자산)에 관한 조건 없이 개별단위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정의

-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성, 충분성, 정기성을 원칙으로 하는데, 특히 충분성은 기본적 욕구와 실질적 자유를 실현할 정도로 충분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급여의 충분성을 기준으로 ‘부분 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으로 분류함(김교성 외, 2018).

- 부분 기본소득은 완전 기본소득(완전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으로 가는 이전 단계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Fitzpatirick, 1999).

▷ 보편성과 무조건성은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유사 제도들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음. 앳킨슨(Atkinson,1996)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을 제안하였음.

- 그는 다양한 형태의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 조건화 된 참여활동에 모든 형태의 유급노동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교육 및 훈련, 취약집단 돌봄(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시킴.

▷ 참여소득은 국가와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재화나 서비스 활동에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생산하고 할당하는 메커니즘 역할을 할 수 있음(Pérez Muñoz, 2018).

- 참여소득은 고용(employment)보다 일(work)의 가치에 더 부합함.

  * 일은 사람의 존재가 목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그치지 않고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가 이루어지는 행위로 정의되며, 따라서 참여소득은 일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삶을 궁극적으로 추구함(이상준, 2021).

▷ 일자리보장제(Job Guarantee)는 국가가 일자리를 찾는 모두에게 인위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욕구를 해결하는 정책 아이디어로서, 민간에서 충족하지 못한 일자리 갭(job gap)을 공공부문의 일자리로 채워 구직자를 모두 흡수해 완전고용을 달성한다는 이상적 목표를 가지고 있음(금민,2020).

- 창출되는 일자리 대부분은 공공부문 혹은 비영리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일자리이며, 민간시장 영역과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서비스 고용에 치중

- 개인의 능력에 맞춰 일자리 수요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일자리 수요가 생겨 수적으로 구직자 보다 많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만들어 지며 이에 대해 기업에 의지하지 않고 정부가 고용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음.

▷ 일자리보장제는 바닥에 있는 이들부터 고용하는 방식(Harvey, 2005)

-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즉 퇴직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여성, 청년 등 노동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

- 시장경제를 작동하기 위해 이들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노동시장에서 이들이 당면한 저임금, 고용불안, 차별, 빈곤 문제에 관심으로 갖고 직접 개입함.

- 참여자의 자발성에 기초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제공하며, 성별, 소득상태, 취업상태에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특성을 지님.

-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괜찮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경제의 자동 안정화 장치로 기능

- 일자리보장제는 고정된 기본 임금(최저임금, 생활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과잉 노동력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안정화 시키는 완충재고 역할
- 완충재고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 : 농산물 가격지원제도
- 공공고용과 민간고용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통해 자동적으로 민간고용이 줄어들면 공공부문의 고용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도 고용이동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대규모 실업자가 초래되어 임금과 총수요가 떨어질 경우 고정된 임금이 설정된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물가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경기순환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해소

- 일자리보장제는 실업을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며 주류 경제학자들이 실업을 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하거나 개인이 해결해야 할 책임으로 접근하려는 관점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서 있음.
- 일자리보장제 지지자들은 실업과 물가상승 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고, 중앙은행의 NAIRU 추정치가 물가상승을 통제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중앙은행이 실업률을 물가상승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접근방식은 오히려 실업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함(Fleming, 2017; Tcherneva, 2020).

5. 노인일자리 정책환경 진단과 대응

▷ 정책환경 진단과 대응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은 일자리 축소로 나타날 수 있음. 이렇게 민간영역에서 일자리 규모는 줄어들게 되면 공적 영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나 소득보장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 또한 4차 산업혁명은 비숙련 저임금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바닥에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음.

-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크게 자리잡은 고령자의 취업시장이 축소되면서 고령자들이 일자리의 기회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짐.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을 통한 노인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기술 및 제품 개발을 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장에 적극 활용

- 신노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필요가 높은 사업아이템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수용성을 높이는 단계적 전략으로서 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측면도 있지만 시장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고 유급 노동 외에도 사회적 의미를 지닌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조건화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이상의 일의 가치를 확장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의미가 큼.

▷ 이러한 참여소득이 지향하는 가치와 실현방식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목표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에도 부합하지만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를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체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참여소득을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참여소득과 일자리보장제는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

- 현재 노인일자리에서 공익활동은 참여소득제와 결합될 경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최저임금의 근로조건(고정된 시간당 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형은 일자리보장제의 가능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일자리 아이템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정책실험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4〉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일자리의 대응전략

변화요인	정책환경 변화	노인일자리 대응
코로나19 장기화	- K, L자형 경제상황 악화로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 -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취약계층 정보 소외 및 돌봄공백 발생	▸ 비대면 서비스 업무 관련 정책개발
4차 산업혁명	- 인공지능이 결합된 기술진보로 인한 일자리 총량 감소 - 정형 편향적인 중간숙련 직무나 숙련수준이 낮은 직무의 기술대체 가능성 증가 - 플래폼 노동의 확장으로 불안정 고용상태의 저임금 근로자 증가	- 기술적 실업의 영향으로 노인이 진입 가능한 민간일자리 축소와 비숙련 저임금 일자리의 경쟁과열로 노인의 취업기회 축소 ▸ 단순반복 육체노동 축소 대신 비반복적 서비스 분야의 노인 일자리 확대 ▸ ICT 기술을 통한 작업장 환경 개선 및 민간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 ▸ 신노년 특성을 활용한 플랫폼 방식의 일자리 활성화
대안적인 사회정책	- 노동과 분리된 사회보장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증대 - 기본소득의 실현 방안으로 참여소득 관심 확대 - 민간 노동시장 축소에 대응한 공공 일자리 수요 창출수단으로 일자리 보장제 논의 확대	-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목표 변경 ▸ 참여소득제, 일자리보장제 원리를 결합한 정책전환

참고문헌

금민(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 지금 바로 기본소득.동아시아.

김교성 외. 2018. 기본소득이 온다. 사회평론아카데미.

서정희, 오욱찬, & 이지수. (2020). 4 차 산업혁명 시기의 장애인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47(47), 89-127.

양재진(2018).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1호.

이상준. (2021). 참여소득, 캐퍼빌러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시민과세계, 107-160.

장지연(2020).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전망: 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황기돈. (2017). 디지털화와 노동정책. 경상논총, 35(3), 37-56.

허준수·이금룡·원영희(2005).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연계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홍태희(2020). 코로나 19 팬데믹 경제위기의 특성과 원인 그리고 전망. 경상논총 vol.38,no.3, 통권 92호 pp. 79-99 (21 pages)

Atkinson, A. B. (1996). The case for a participation income. Political Quarterly, vol. 67.

Arntz, M., Gregory, T., & Zierahn, U. (2016).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Fitzpatrick, T. (1999). Ecologism and basic income. In Freedom and Security (pp. 176-201). Palgrave Macmillan, London.

Frey, C. B., & Osborne, M. (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zation. University of Oxford.

Fleming, J. (2017). Government reformed: Values and new political institutions. Routledge.

Gregory, T., Salomons, A., & Zierahn, U. (2015). Technological change and regional labor market disparities in Europe.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Mannheim.

Goos, M., Manning, A., & Salomons, A. (2014). Explaining job polarization: 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and offshoring. American economic review, 104(8), 2509-26.

Harvey, P. (2005). Right to work and basic income guarantees: competing or complementary goals. Rutgers JL & Urb. Policy.2(1) 8-63.

ILO. (2020).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Second Edition. Geneva : ILO.

Lund, S., Madgavkar, A., Manyika, J., Smit, S., Ellingrud, K., Meaney, M., & Robinson, O. (2021). The future of work after COVID-19. McKinsey Global Institute, 18.

Marcolin, L., Miroudot, S., & Squicciarini, M. (2016). Routine jobs, employ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global value chains.

Mercer & Wyman(2018) THE TWIN THREATS OF AGING AND AUTOMATION.

OECD(2020). Employment Outlook 2020-COVID-19: From a health to a jobs crisis.

Pérez-Muñoz, C. (2016). A defence of participation income. Journal of Public Policy, 36(2), 169-193.

Ryan Severino(2020). The case for a "K-shaped" recovery? JLI.

Tcherneva, P. R. (2007). What are the relative macroeconomic merits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direct job creation and basic income guarantees?.

Tcherneva(2020). The Case for a Job Guarantee. Polity|.

WEF, W. (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lobal Challenge Insight Report, 167.

World Bank, (2020). Global economic Prospects.

한국노인인력개발원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www.kordi.or.kr